2015
정 기 총 회

- 일시 2015년 1월 26일(월) 11:00
- 장소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행 사 안 내

1부

등 록	10:20 ~ 10:40
식전공연	10:40 ~ 11:00
개회 및 국민의례	11:00 ~ 11:03
내빈소개	11:03 ~ 11:10
의정봉사대상 시상	11:10 ~ 11:25
개 회 사	11:25 ~ 11:28
환 영 사	11:28 ~ 11:31
축 사	11:31 ~ 11:50

2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50 ~ 12:00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12:00 ~ 12:10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12:10 ~ 12: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문 낭독	12:25 ~ 12:30
폐 회	12:30

3부

오 찬	12:30 ~ 14:00



CONTENTS

전국시군자치구의회 헌장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헌장 04

인사말

• 개회사(회장) 06
• 환영사(서울특별시장) 08
• 축사(내빈) 0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21

보고사항

•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 29
•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61
•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감사 보고 71
•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 보고 79

참고사항

• 참고사항 83

전국시군자치구의회 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부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통제하며, 살림살이를 챙겨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손발이 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이다. 지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주민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지방의회의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기 위해 헌장을 제정한다.



1.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구현함을 의정활동의 최고목표로 한다.

1.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사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1. 주민의 대표로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

1. 의정활동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배격하여 공익을 실현한다.

1.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1. 지방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분권형 국가를 실현시킨다.

2004년 2월 27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동

개 회 사



존경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님 여러분!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장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서울올림픽의 감동과 한성백제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7대 의장협의회가 구성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장님들을 처음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의장님들께서는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오로지 투철한 봉사정신 하나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이제 지방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한다는 정설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오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로 밀실행정은 사라졌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봇물 터지듯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 생활환경의 변화로 삶의 질은 몰라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는 지방자치 위기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44.8%에 불과하여 오히려 18.7%나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지방의원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함으로써 부패정치를 양산하고 지역정치인을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으며, 유독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바꿈으로서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유입을 막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문제, 주민들과 지방의회와의 갈등만 부추기는 현행 의정비 제도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렵사리 일구어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특·광역시 등 대도시 자치구의회를 효율성 운운하며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스무 살 청년으로 자란 성인에게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재촉해 대는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중앙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제발 세계적인 흐름과 시대적 소명에 따라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지방정치는 지역주민에 맡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들께서는 그동안 지방자치 불모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로지 투철한 봉사정신 하나로 오로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찬란한 지방자치시대를 통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오늘 2015년도 정기총회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의장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월 2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심 우 성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심우성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 · 군 · 구의회 의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3년간 기초의회는 수레바퀴의 한 축처럼 시 · 군 · 구 집행부와의 긴밀한 공조,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며 지역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부활 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인생으로 치자면, 이제 막 청년기쯤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자치행정의 역량이 크게 성장한 면도 있지만, 아직도 중앙의 각종 제도적 · 재정적 · 법률적 제약 속에서 반쪽짜리 자치에 그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와 역량에 근거한 정책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듯 우리 지방자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전국은 전통적 행정구역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교류가 더욱 절실합니다. 지역현장의 고민과 요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러 의장님들과 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멀리 땅 끝에서부터 서울 각 자치구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연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의장님들과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치단체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뜻 깊은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축 사



심우성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의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의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정봉사대상을 받으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여러분께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올해로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결정적인 국가경제 위기상황이 있었고, 여야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되었고, 국가경제 패러다임은 IT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 부활 후 24년 동안 우리사회는 과거 같으면 한 세기는 족히 걸릴 변화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여는 실로 컸습니다. 여러분은 각 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결속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더 큰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또 급속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여러분의 우려와 바램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반드시 귀담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과 지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한편으로, 중앙과 지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나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의지 또한 우리사회의 제반 현실이 더욱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의장님 여러분의 결속과 헌신, 그리고 우리사회에 대한 충정을 더욱 깊게 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건승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월 26일

국회의장 정 의 화

축 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지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심우성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226개 자치구 의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던 1991년은 우리나라에서 세계화와 지방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국민국가는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크기에,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지방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전국의 지방들은 각자 주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독자적 발전을 꾀했습니다. 온갖 특산물이 등장하고 더 없이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가 열렸으며,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야심찬 시도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 이래 대한민국은 훨씬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SNS의 확산으로 세계는 더욱 좁아졌고, 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지방은 더욱 자유롭고 더욱 창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 발표해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를 확립 · 실천하고 자치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지방들이 대한민국보다 더 유명해지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시군자치체와 의장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미래를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 무 성 드림



축 사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먼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묵묵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심우성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는 민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고단한 시기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국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직접 챙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민생의 파수꾼이요, 국민을 위한 참 일꾼입니다. 지방자치의 기초가 굳세어야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기총회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여러분들의 교류와 소통으로, 더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 희 상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진 영 의원입니다.
민선 6기 2015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수사에 걸맞지 않게 스스로의 힘만으로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날로 늘어가는 중앙정부의 복지 지출에 조응해야 하고,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주민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방부채의 증가와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만 보더라도, 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해줍니다.

지방자치가 마주한 현안으로 '지방소비세율 ·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고보조 사업 국가부담비율 인상', '자주재원의 확대 방안'등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손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 증진'과 '중앙-지방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큰 화두의 출발점은 민선 6기의 활동성과에 달려 있는 만큼, 226명 의장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는 일상과 지방자치 현장에서 누구보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장협의회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5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총회가 지방자치 실현에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안전행정위위원장 진 영



축 사



「전국시 · 군 ·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여러분,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새로 출범하여 그동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지방 자치의 눈부신 변화를 이끄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의 해이며, 지방자치 20년의 뜻 깊은 해입니다.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행복과 주민편의가 증진되도록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맞추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6 · 4 지방선거를 통해 제7기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과거의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신(創新)의 마음으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의회가 자율과 책임 하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시 · 군 ·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심우성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의장님들의 건승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을미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 장관 정 종 섭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대신하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5년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심우성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재구성 25주년을 앞둔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고, 불합리한 의정비 제도는 물론이고 시·군·자치구의회가 요구해 온 정당공천제 폐지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방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린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당면 과제로 삼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시·도의회 역시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와 인사 청문 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의 첫 출발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26일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위 성과물이 나오는 즉시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최종 개정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전국 광역 · 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공유한 바 있듯이 2015년 시 · 군 · 자치구의회와 시 · 도의회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 · 군 · 자치구의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저희 시 · 도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5년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올 한해 의장님 모두의 행복과 건승은 물론이고 전국 시 · 군 · 자치구의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대구광역시의회 의장) 회장 이 동 희

축 사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입니다.

오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초대되어 풀뿌리 자치를 이끌어 가시는 지방의원님들과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님 그리고 이동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님과 행사를 주관하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심우성 대표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1년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는 등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군의회 폐지 방안'에서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방에 넘기고 지역의 일은 중앙이 아니라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이 계획을 하게끔 중앙은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적 노력과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 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그리고 지방의회가 가장 가까워야할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 조차도 여전히 차별적 인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험난하며 많은 장벽이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의회가 받는 이러한 인식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에 대한 비전과 모습을 그려가며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지방분권을 핵심 기조로 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여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의의 전당인 기초의회는 대한민국 미래 지역발전을 위해 한 차원 수준 높고 실용적 가치가 있는 생활정치를 실시하고 주민 곁에 한 발 더 다가가 살아 숨 쉬는 지방의정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모습들이 21세기 우리의 지방자치를 역량강화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의 시대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총회'가 성공리에 개최됨을 축하드리고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 충 훈 순천시장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언저리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통해 나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세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 재정자주도는 69.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는 2013년 38개 단체에서 2014년도에는 78개 단체로 늘어나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내 지역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하고 공천과정에서의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 나라의 격변기로 인하여 30년간 중단되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발전은커녕 오히려 행정효율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도시 자치구 · 군의회 폐지 운운하며 지방자치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황당한 논리로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해괴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 분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2012년 10월 9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관한 말들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전국의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장 모두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하자!
둘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하자!
셋째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실시로 기초지방자치 본질을 구현하자!
넷째	특 · 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다섯째	주민갈등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여섯째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하여 의정발전 이룩하자!

2015년 1월 26일

전국 시 · 군 · 자치구 의장 226명 일동



현황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연 혁

- 1991년 11월 10일 협의회 회칙 시행
- 2000년 3월 9일(제54차 총회 개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회칙 제정
- 2000년 3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행정자치부 신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5
- 2000 4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설립신고 수리통보 접수
- 2003년 11월 5일 기초의회 증가(회원수 232개 ⇒ 234개)
  -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의회 신설
- 2004년 2월 27일 명칭변경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2006년 6월30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4개 ⇒ 230개)
  - 제주도 4개 시군구의회 폐지
- 2010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0개 ⇒ 228개)
  -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 2012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8개 ⇒ 227개)
  - 연기군 세종시 편입
- 2014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7개 ⇒ 226개)
  - 청주시·청원군 통합

회 원 수 : 226개 의회 의장

	시의회	군의회	자치구의회
226	75	82	69

임원 현황

위	시도 대표회장
전 국 회 장	심우성(충남 청양군)
수 석 부 회 장	임태상(대구 서구)
감 사	양영모(전남 신안군), 유원석(경남 창원시)
사 무 총 장	우천규(전북 정읍시)
부 회 장	성임제(서울) 천만호(부산) 이종민(인천) 이영순(광주) 문제광(대전) 김영길(울산) 박권종(경기) 정진권(강원) 김병국(충북) 이철우(경북)

❍ 임원의 임기 : 2014. 7. 1. ~ 2016. 6. 30.

회 의

- 총 회(년 1회) :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요안건의 심의·의결·승인
- 시·도대표 정례회의(매월) :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일반안건 심의·의결
- 임시회(필요시) : 전국대회 등 주요행사 및 대표회의 소집요구 시

예 산 : 연간 904백만원(각 지방의회 부담금)

주요활동사항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및 정책 협의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상호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조정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위상 정립 및 기능 강화, 의정활동 지원, 홍보 등

사 무 처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1207호(현대토픽스)

직원 현황

구분	계	사무처장 (계약직원 일반직 공무원)	전문위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계약직원)	사무과장 (일반직 5급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직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원)			
					소계	6급	7~8급	무기계약직
정원	8	1	1	1	5	1	3	1
현원	5	1	1		3	1	1	1
증감	△3			△1	△2		△2	

※ 사무처 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근무



보 고 사 항

◈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

◈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



◉ 2014년도 시도대표회의 개최

◉ 2014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 인터뷰 등 홍보활동

2014년도 시도대표회의 개최

■ 회의 개최현황

	정례회의	임시회의	비고
6	5	1	

■ 안건 심의결과 현황

분	내 용	처리 결과
계	**13건**	
건의(결의)문 채택(6건) - 건의 3 - 결의 3	·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수정가결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원안가결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건의문	원안가결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문 채택의 건	원안가결
협의회 운영관련 (7건)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 보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교체 임명의 건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건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 선출 건	수정가결
	· 사무직원 임명의 건	원안가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2014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총괄

	반영(수용)	검토·추진 중	미반영(수용불가)	미회신	비고(결의안)
6건	1건	2건	0건	0건	3건

○ 내역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14.03.11. (제304호)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반대 결의안	◦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자주성과 자치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안전행정부 (지속검토)
2014.03.11. (제306호)	◦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 장소인 서대문형무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촉구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지속검토)
2014.11.18. (제310호)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건의문	◦ 원전 및 수력발전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	행정자치부 (수용)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1.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제8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4. 1. 8(수) 15:00
○ 장 소 : 시민행동 본부(청년유권자 연맹 사무실)
○ 참 석 : 한승호 사무처장
○ 내 용
- 정당공천 폐지 향후 활동 방안 논의
- 1월 23일 대규모 집회 경비 분담(협의회 : 버스 임차료)

2.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 9(목) 11:3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참 석 : 김인배 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사무총장,
유재호 인천대표회장
○ 내 용
-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한 정당공천제 폐지
-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즉각 중단

3. 정당공천제 폐지 새누리당사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 13(월) 09:00
○ 장 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참 석 : 박용모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등 6명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당론 조속 확정

4. 정당공천 폐지 사회원로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 16(목) 11:0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원로 : 이부영, 윤여준, 황한식, 강대인, 정세욱, 정해걸 등
○ 주요내용 :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5.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 앞 대규모 집회(기자회견)

○ 일　시 : 2014. 1. 23(월) 14:00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참　석 : 시민행동 등 각계각층 사회단체 250명
(협의회 : 김인배 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사무총장,
유재호 인천대표회장, 이명연 전북 대표회장, 배종범 전남 대표회장)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당론 조속 확정

6.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14. 2. 5(수) 14:00
○ 주　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8층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김인배 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사무총장
(한승호 사무처장 배석)
○ 주요내용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설명
- 지방의회 협의회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7.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제9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4. 2. 7(금) 12:00
○ 장 소 : 시민행동 사무국(청년유권자 연맹 사무실)
○ 참 석 : 8명(협의회 - 사무처장)
○ 내 용 : 국회 정치개혁특위 연장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민주당, 새정치추진위원회 창당 준비 대표 등 면담 및 공동 기자회견
- 새누리당 포함 시도지사 출마 예상자 설문조사 및 결과 언론 공개

8.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제출

○ 일 시 : 2014. 2. 17(월)
○ 제출처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제도 분과위원회)
○ 내 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9.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토크 종합토론회

○ 일 시 : 2014. 2. 18(화) 14:00~17:00
○ 장 소 : 은행회관 컨벤션홀 2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명동 소재)
○ 주 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참 석 :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외 2인
○ 내 용
-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 지방분권 방향과 추진 전략
- 사무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 전략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 자치경찰제도 도입
- 주민자치회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10. 지역발전 전략포럼 실무협의회

○ 일 시 : 2014. 2. 18(화) 17:00~18:00
○ 장 소 :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 1층 베르쟈뎅
○ 참 석 :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상견례 및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11. 정당공천폐지 촉구 정치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4. 2. 20(목) 11:00
○ 장 소 : 국회 본관
○ 참 석 :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사무총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정치권 : 김한길 민주당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회의원)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12. 야권의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과 새누리당 결단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4. 3. 3(화) 11:0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참 석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박재율(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기우(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본부장)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이창용(경북분권협의회 총괄간사)
이성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및 새누리당 결단 촉구

13. 지역발전 전략포럼 실무협의회

○ 일 시 : 2014. 3. 11(화) 11:00~13:00
○ 장 소 : 운현궁 인근 강호 한정식
○ 참 석 :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공동주최 기관의 실무 대표들로 실무협의회 구성
- 행사명, 일시, 의제, 초청연사 등 모든 주요 안건 실무협의회에서 결정

14. 한국의회학회 학술회의 참석

○ 일 시 : 2014. 3. 21(금) 14:0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자 :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한국의회학회, 한국의정연구회 공동주최 토론회 6.4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발전

15.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 7. 16(수) 15:00~16: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안행부 CS룸
○ 참석대상 : 15명
- 안행부 : 지방행정실장, 지방행정정책관, 자치제도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외 1명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분권국장
- 지방4대협의체 : 사무처장 및 수석전문위원(협의회 : 사무처장)
-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안전행정국장
- 민간위원 : 열린사회시민연합 박희선, 한경대 최승범 교수
- YTN : 한상규 팀장, 박상준 과장

○ 주요내용
-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세부 운영계획 보고
- 운영계획안 및 관계기관 분담업무 협조사항 등 논의

16. 2014년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 7. 30(수) 13:30~16: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안행부 CS룸
○ 참 석 : 13명
- 안행부 제2차관 및 실무위원 등 13명
- 협의회 : 사무처장(실무위원으로 참석)

○ 주요내용
-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부담 적정성 심의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시행계획(안) 보고

17. 지방분권분과위원 제1 · 2 실무위원 합동 워크숍

○ 일 시 : 2014. 8. 1(금) 14:00~18: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안행부 CS룸
○ 참 석 : 34명
-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분권국장, 안재헌 분과위원장 등 분과위원 5명 제1·2 실무위원 26명
- 협의회 : 사무처장(실무위원으로 참석)

○ 주요내용
- 위원회 주요현안 보고 및 논의
- 지방분권과제 관련 주제발표 및 논의

18. 지방세제정책관실 회의 참석

○ 일 시 : 2014. 8. 8(금) 11:00~12: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지방세제정책관실
○ 참 석 : 7명
-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4명
- 협의회 : 사무처장

○ 주요내용
- 장기간 미조정 지방세 정액세율의 상향조정
-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등 지방세제 개편 방향
- 정부 입장 설명 및 협조 요청

19. YTN과의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14. 8. 12(화) 15:30~17:30
○ 장 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서울 방이동)
○ 주요내용
- YTN 지역희망 프로젝트 “지역이 희망이다” 프로그램을 통한 연중 기획방송 코너 운영
· YTN 지역 발전 프로젝트 “우리 마을 이야기”를 통한 생태마을 및 도시 공동체 성공 사례 등 발굴 보도

- 지자체 이슈 상시 보도
  ·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장 출연 적극 수용
  · 지방 주요행사 적극 보도
- 대한민국 지방발전 전략포럼 개최
  · 2014. 10. 29(수)~10. 30(목) 대구 EXCO
  · 지자체 관련 국내외 전문가, 관계자들의 공론의 장 마련
  · 참여형, 토론형 포럼으로 지자체 의견 적극 개진

○ 추가 논의사항
- 지방자치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한 지방의회 알리기 활성화
  · 지방의회 현장 활동상황 적극 보도
  · 지방의정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발굴 토론회 수시 개최로 지방의회 재평가 및 주민 신뢰 제고 등 지방의회 바로 알리기 적극 추진

○ 참 석 : 6명
- 사무처(3명) : 성임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사무처장 외 1명
- YTN(3명) : 이영현 마케팅국장, 한상규 부국장, 박상준 과장

20. 지방발전 전략 포럼 실무협의회 회의

○ 일 시 : 2014. 8. 28(목) 15:00~17:00

○ 장 소 : 종로구 삼일빌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석대상(지방발전 전략포럼 실무협의회 위원)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및 YTN 각 실무위원
- 협의회 : 사무처장

○ 내 용
- 2014 대한민국 지방발전전략포럼 기본계획(안)세부 검토
- 포럼 주제 선정
- MOU 체결 일정 및 방법 논의

☞ 협정체결일이 9월 22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협의회 회장단 미 구성으로 인해 서명은 회장단 구성 이후로 하기로 하고 협정 당일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함.

21.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정(MOU) 체결

○ 일 시 : 2014년 9월 22일 15:00

○ 장 소 : 서울 상암동 YTN 신사옥 YTN 뉴스퀘어

○ 협정 내용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YTN 간의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정(MOU) 체결

○ 참석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
-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남 순천시장)
- 이강창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이성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배석규 YTN 사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우리 협의회는 회장단 미 구성으로 사무처장이 참석

·9. 22. 현재 시도의장협의회와 시군구의장협의회는 대표회장 미선출로 협정서 서명난을 공란으로 하되 선출 이후 서명하는 것으로 함.

○ 주요 프로그램

- 연중 기획 : 지역명품 소개, 단체장 인터뷰, 우리 마을 성공사례 등
- 자치단체 이슈 상시보도 : 단체장 릴레이 대담, 주요행사 적극 보도 등
- 대한민국 지방발전 전략포럼 : 지방자치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 지난 10.29~30일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등 지방 주요 현안에 관한 '맞짱 토론회'를 YTN 주관으로 개최됨

22.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제정관련 의견수렴 및 토론회

○ 일 시 : 2014. 9. 30(화) 15:00~17: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413호 지역발전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7개 시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내지 주무계장
- 충북, 광주광역시 본청 총무과 업무추진비 관련 주무계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출 주무관
- 협의회 : 사무처장

○ 내 용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논의
※ 전국 각 의회에서 접수된 의견수렴분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 의견 개진

23.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방자치발전전략포럼

○ 일 시 : 2014. 10. 29(수)~10. 30(목)
○ 장 소 : 대구 EXCO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김영길 울산대표회장, 국회의원, 안행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 학계 교수, 지역 주민 등 1,000여명 (의원 및 의장 100여명 참석)
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외 1인
○ 주요내용
-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10. 29. 13:30)
-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10. 29. 14:00)
- 지방발전 전략포럼 맞짱토론(10. 29. 17:00~18:30)
· 내 용 :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 토론자 : 김영길 울산대표회장
- 지방발전 전략 포럼 및 주민 참여 마당(10. 30. 10:30~18:00)

24.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 시 : 2014. 10. 29(수) 12:40
○ 장 소 : 대구 EXCO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 주요내용
-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확충 등에 관하여 공동 대응
-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TF팀 구성 공동 협력하기로 결의

25. 지방재정세제 개편 관련 현안회의 참석

○ 일 시 : 2014. 10. 31(금) 11:30~13:00
○ 장 소 : 국무위원 식당(정부서울청사 2층)
○ 참 석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실장, 한국지방세 연구원장, 시도발전연구원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장, 한국지방세협회장, 시·도 세정과장 및 학계 교수, 지방 4대 협의체 전문위원 등
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 주요내용
- '14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추진성과
- '15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발전방향
- '15년 지방세제 업무계획 설명
- 향후 지방세 방향관련 의견 개진 및 토론

26. 지방의회 제도 개선 설명회

○ 일 시 : 2014. 10. 31(금) 14:00~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안행부 CS룸
○ 참 석 : 안전행정부 : 선거의회과장 외 3명, 시·도 의회 협력계장 19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 주요내용
- 지방의회제도 개선 방향 설명 및 의견 수렴
☞ 안행부의 개선계획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우리협의회 대표 회장님들에게는 안행부 장관이 직접 설명토록 요구

27.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일 시 : 2014. 11. 3(월) 14:30~18:0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사 회 : 김중석 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발제자 : 이기우교수, 안성호교수, 이재오 국회의원,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토론자 : 장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
박명흠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대표, 신정훈 국회의원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안재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감사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 주요내용
-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논의
-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여 국민과 지역의 권한 확대

28. 지방분권개헌포럼 제2차 준비회의

○ 일 시 : 2014. 11. 3(월) 18:00~19:3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18층
○ 참 석 : 정세욱교수, 김중석교수, 이기우교수, 안성호교수,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창용 지방분권 대구·경북대표, 박재율 균형발전대표, 4대 협의체 실무자 등
협의회 : 행정팀장
○ 주요내용
-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국민운동 단체들은 지방분권개헌포럼 발족키로 협의
- 다양한 채널과 회원 워크숍, 세미나 활용 홍보
- 홍보물 제작

29. 조례 개선과제 지방4대 협의체 합동 검토회의

○ 일 시 : 2014. 11. 4(화) 11:30
○ 장 소 : 법제처
○ 참 석 : 이성재 사무처장
○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소개 및 조례 개선과제 54건에 대한 합동 검토 등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개요

○ (개념) 지자체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등 관련 지원을 법제처에 요청하면, 이를 지원('14.3~)

- 해당 지자체 조례 전수를 대상으로 정비과제 발굴* 및 최종 정비안 확정, 지자체에서는 자체 정비 추진

*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등 포함),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으로 분류하여 정비과제 발굴

○ (지원체계) 지자체에서 자율정비 지원 요청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안 마련 → 최종 정비안 확정 → 지자체는 자체 일정에 따라 정비 추진

30. 지방4대 협의체 실무자 간담회

○ 일 시 : 2014. 11. 11(화) 10:30~13:0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종로 삼일빌딩)

○ 참 석 : 4대 협의체 전문위원 및 분권관련 부서장
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외 1인

○ 주요내용

- 지방4대 협의체장 공동 관심사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한 현안사항 사전검토
- 공동 관심사항 : 지방분권과제 입법 발의 내용을 위주로 선정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7조 개정
  ·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 지방4대 협의체 총·처장 회의 11월 19일(수)개최하여 최종 결정
-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12월중 실시

3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실무위원 워크숍

○ 일 시 : 2014. 11. 13~14

○ 장 소 : 더케이 서울호텔

○ 참 석
- 위원회 : 심대평 위원장, 부위원장, 지방분권분과위원장 및 위원, 중앙권한이양 실무위원, 기획단장, 지방분권국장 등
- 지자체 : 17개 시·도 지방이양(분권) 담당과장
- 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실무위원)

○ 주요내용 : 주요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실무위원회 운영 매뉴얼 보고, 분권추진 관련 주제발표, 전문가 특강, 이양 실무사례 발표 등

32. 조례 개선과제 지방4대 협의체 합동 검토회의

○ 일 시 : 2014. 12. 1(월) 11:00~12:30

○ 장 소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회의실

○ 참 석 : 이성재 사무처장

○ 주요내용 : 자치법규 지원제도 및 조례 개선과제 50건에 대한 지방4대 협의체 의견 수렴 등

33. 지역희망 박람회

○ 일 시 : 2014. 12. 3(수) 10:30~12:00

○ 장 소 :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이영순 광주대표회장, 우천규 전북대표회장

○ 주요내용 : 17개 시·도와 지역정책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전시회 구성

34. 지방4대 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14. 12. 5(금) 11:0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4대 협의체 총·처장, 정책연구실장, 전문위원, 분권지원부장 등
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외 1인

○ 주요내용
- 총·처장 상견례
- 지방분권 관련 4대 협의체 별 현안사항 논의

35. 『지방자치발전 T/F』 2차 실무모임

○ 일　시 : 2014. 12. 9(화) 10:3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4대 협의체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 담당 과장
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외 2인

○ 주요내용

- 지방분권 의식 확산을 위한 주민아카데미(4대 협의체 공동)
- 지방분권 대토론회 공동 주관 개최(2015 민선20주년 기념)
  ☞ **2015. 3월 경 개최**
- 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4대 협의체 적극적 공조 대응

36.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 브리핑

○ 일　시 : 2014. 12. 16(화) 15:00

○ 장　소 : 협의회 사무실

○ 참　석

- 협의회 : 심우성 대표회장, 이성재 사무처장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서철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국장
  김영빈 기능개편과장

○ 주요내용

- 특별시 자치구 : 구청장 직선, 의회 미 구성
- 광역시 자치구·군
  ① 1순위(행정구·군) : 시장이 구청장·군수 임명, 의회 미 구성
  ② 2순위 : 특별시 개편안과 동일

37.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

○ 일 시 : 2014. 12. 22(월) 16:00~17:0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장관실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임태상 대구대표회장, 이영순 광주대표회장, 정진권 강원대표회장, 우천규 전북대표회장

○ 주요내용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건의 및 토의

-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 의정비 제도 개선

38. 유성엽 국회의원 방문

○ 일 시 : 2014. 12. 22(월) 18시

○ 장 소 : 유성엽 국회의원실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우천규 사무총장

○ 주요내용

- 의정비 현실화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39. 지방분권개헌포럼 제4차 준비회의

○ 일 시 : 2014. 12. 26(금) 12:00~14:00

○ 장 소 : 서울 중구(금수복국)

○ 참 석 : 수석전문위원 외 2인

○ 주요내용

- 지방분권개헌포럼 조직 구성(안) 및 창립 기념식 확정 : 2015. 2. 4(수) 14:00
- 지방분권 개헌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순회강연회 실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방자치 위기를 초래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외면하고 지방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자치구의회 폐지” 논쟁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정치권은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작년 10월28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 등 6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피력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을 다시 지피운데 이어 지난 1월 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지방자치 제도개선안을 거론하며 다시금 자치구의회 폐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은 비단 작금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워 마치 지방의원 길들이기 혹은 정당공천 폐지 입막음용 협박 카드로 사용하듯 써먹어온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0년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며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하향식 정당공천으로 금권공천 등 정치부패는 물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확실히 예속시킴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 왔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부분 잘못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대부분이 공천제도의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나 유독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만이 폐지반대에 목숨을 거는 구차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를 비롯한 주요후보 세 명 전원이 서로 앞 다투어 정당공천 폐지를 당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12년 11월 20일 전국의 지방의원 3천여 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서면약속은 물론 구두 연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공천폐지를 약속하고 우레와 같은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받은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동안 지방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대의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협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크나큰 퇴보이자 손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대도시의 주민들은 다른 도의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정책의 표본이 될 것이며 다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겨우 돋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중앙정치인들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독점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즉시 중단 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여망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출범 발전시켜왔다.

이제 와서 다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기초지방선거에서 만큼은 하향식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여 지방정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몰고 온 정당 공천제를 즉각 폐지하라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정책인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결정으로 6.4 지방 지방선거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 투쟁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4년 1월 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5년 제정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정부는 내각 각료격인 정무관 파견을 결정했다.

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국적 그리고 국가차원의 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행되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베신조 일본 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정부 및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부정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일본 정부와 극우인사들의 비이성적인 망언과 망동을 규탄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시에는 일본과의 모든 교류활동 및 방문을 중단함은 물론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 주변 국가들에게 저지른 침략·침탈 행위와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2월 27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9.12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입장(안)

지난 9월 12일(금)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와 지방 간 8:2 수준인 세원 구조를 6:4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그동안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한 지방소비세율 확대,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개편 등 국세의 지방이양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4. 9. 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나라의 격동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국지방 동시 선거를 계기로 명실공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이후 2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국가 총 사무와 지방의 사무 비율은 8:2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와 지방의 재원 수준도 역시 8:2의 수준이며 지방자치시대가 재출범한 1995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2011년 51.9%, 2013년 51.1%로 줄어들다가 2014년엔 44.8%로 급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013년 38개에서 2014년에는 78개로 늘어나면서 최악의 재정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이 같은 원인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의 뚜렷한 대책도, 지방정부와의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무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무리하게 전가시키는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중요한 여타 행정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며 머지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면치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정책은 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핵심과제이며 따라서 복지재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경쟁력은 지방경쟁력의 토대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지방경쟁력은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강화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을 포함한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전국의 226명의 기초의회 의장 모두는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래 요구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35%, 지방65%' 에서 '서울 40%, 지방 70%' 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2009년 정부 발표안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향후 20%까지로 확대해야 하며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14년 10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안전행정부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 에 대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입장 -

지방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전행정부 발표 “지방의회제도 개선 방안” 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29일 대구광역시 EXCO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현장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내용이 포함된 그야말로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기에 충분했다.

1949년에 제정된 (구)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으나 1987년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분명하게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으로써의 효율성 결여 및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 등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형태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써 지방의회 직렬 신설 등 그간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아울러 함께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책임성 제고 방안’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입장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즉시 환원하라!

하나, 지방의회 자율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하라!

하나, 지방의회 제도개선 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라!

2014. 11. 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치구·군의회 폐지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자치구·군의회 폐지” 운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자치구·군의회 폐지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동안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대도시의 주민들은 다른 도의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다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따라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여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즉시 철회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2. 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인터뷰 등 홍보활동

1. KBS 원주 방송국 인터뷰

○ 시 : 2014. 1. 16(목)
○ 출 연 : 김인배 대표회장
○ 인터뷰방법 : 라디오 생방송 전화 인터뷰
○ 내 용 :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협의회 입장

2. “지방자치” 인터뷰

○ 일 시 : 2014. 11. 3(월)
○ 장 소 : 전국협의회 사무실
○ 내 용
- 기초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역량강화
- 정당공천제 폐지,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 관련 협의회 입장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3. KBS 대전 “생방송 대전입니다.” 인터뷰

○ 일 시 : 2014. 12. 11(목) 오후 6:20~6:37(17분간 생방송)
○ 출 연 : 심우성 대표회장
○ 인터뷰방법 : 스튜디오 생방송
○ 내 용 : 자치구폐지,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

4.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

○ 일 시 : 2014. 12. 22(월) 09:00
○ 장 소 : 전국협의회 사무실
○ 내 용 : 특·광역시 자치구폐지 입장,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역량 강화
○ 참 석 : 심우성 대표회장, 임태상 대구대표회장, 이영순 광주대표회장,
정진권 강원대표회장

5. 각종 매체 기고

○ 월간 “지방자치” **2014년 1월호** 신년사

- 내용 : 지난 대선 시에 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후보들이 공약한 정당 공천제 폐지 실천 촉구

○ 월간 “자치발전” **2014년 1월호** 기고

- 내용 : 지방자치는 기심(機心)정치를 사양한다

○ 월간 “공공정책” **2014년 1월호** 신년사

- 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 “자치의정 ” **2014년 1월호** 신년사

- 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 “전국매일신문” **2014년 1월호** 신년사

- 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년 11월호** 기고

- 내용 :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협의회 활동 강화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기 본 목 표

◆ 지방분권형 제도개선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

◆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현

◆ 지방의정 주민참여 확대·의정혁신으로 선진 지방의회상 구축

운 영 방 향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발굴 및 개선

◆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 지방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추 진 계 획

Ⅰ.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

Ⅲ.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협의회 활동 강화

중점추진시책

Ⅰ 개헌 추진

◈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쳐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임

· 지방자치 정상화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Ⅱ 특·광역시 자치구·자치구의회 폐지 철회

◈ 대의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임

.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여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즉시 철회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야 함.

Ⅲ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의 편차, 주민과 지방의회의 갈등으로 의정비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으로 지급기준액을 책정토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야 함.

Ⅳ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 기관대립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장악하고 있는 한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불가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환원하여야 함.

Ⅴ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 중선거구제도의 경우 소지역간 갈등 유발, 선거비용 과다, 접성의 민주주의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등 책임성과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음

·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여야 함.

Ⅵ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기준이 미흡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치 불신, 정치혐오의 요인으로 작용

·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조속히 폐지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함.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협의회 활동전략 수립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시군자치구의회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1】 정기총회

○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11: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 소요예산 : 41,700천원
○ 참석대상 : 226명(시군자치구의회 의장)
○ 주요내용
- 제7회 의정봉사대상 시상 등
-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감사 및 2015년도 예산 보고

【2】 시도대표 정례회의

○ 개 최 일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참석대상 : 15명(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안건심의 및 주요현안사항 토의, 지역별 정보교환 등

【3】 시도대표 임시회의

○ 개 최 일 :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참석대상 : 15명(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긴급 당면 현안사항 논의

【4】 시도대표 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 시　　기 : 시도대표회의에서 결정
○ 대　　상 : 시도대표회장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주요내용
-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 제7대 전반기 협의회 활동 추진방향
- 의정활동 역량 강화

【5】 의정활동 및 지방의원 권익강화 자문단 운영

○ 시　　기 : 연중
○ 방　　법 : 협의회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통한 자문단 운영
○ 주요내용
- 기초의회의원 권익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향
-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 관련 질의

【6】 협의회 활동상황 적극 홍보

○ 게 시 일 : 연중
○ 홍 보 처 : 신문사, 잡지사 등 지방자치 관련 매스컴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주요내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중점추진시책 추진상황 적극 홍보
- 시도대표회 언론 보도내용 및 협의회 활동상황 홈페이지 게재
- 협의회 일정, 주요활동사항, 안건처리 등 신속한 정보 제공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

◈ 자문위원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현안문제 해결 및 의장단 역량 강화로 협의회 위상 제고와 활동방향 제시

【1】 자문위원 등 간담회 개최

○ 회의개최 : 연 2회
○ 소요예산 : 6,400천원
○ 대　　상 : 협의회 회장단, 자문위원, 고문(여건에 따라 시도대표회장 전원)
○ 주요내용 :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현방안 강구

【2】 실무협의회 운영

○ 회의개최 : 연 1회
○ 대　　상 : 15명(시도대표회 의회사무국·과장)
○ 소요예산 : 1,000천원
○ 주요기능
- 당면사항 협의
- 협의회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및 중요사항 검토

【3】 지방 4대 협의체 등 정책간담회 개최

○ 회의개최 : 연 2회
○ 참　　석 : 지방자치 4대 협의체 사무총(처)장, 행정자치부 관계자 등
○ 소요예산 : 1,000천원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 공동협력 체제 구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협의회 활동 강화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국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각급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공동협력방안 구축 및 지방분권 활동 전개

◈ 대통령 및 국회 방문 면담을 통하여 지방분권, 특히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1】 특·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 철회 활동 전개

○ 자치구·군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 국회 및 중앙부처 송부

○ 자치구·군의회 폐지 반대 결의대회 실시, 철회 강력 촉구

○ 국회방문(양당대표, 정치개혁특위위원장・간사 등) 면담 건의

○ 소요예산 : 20,000천원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 지방분권개헌포럼 창립대회

○ 일　　시 : 2015. 2. 4(수) 14:00~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참　　석 : 200여명(지방4단체,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등)

○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분권국민운동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전국시도지방분권협의회(준)
- 전국지방신문협의회
- 한국지역언론인클럽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 희망정치시민연합
-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개헌 촉구 시국선언문 및 향후계획 발표

□ 앞으로 계획

○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연구용역을 위한 협약서 체결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 국민과의 소통 : 분권·자치·헌법 교육 실시
- 기　　간 : 2015년 3월 ~ 12월
- 방　　법 : 워크숍, 세미나, 토크콘서트, 강연회, TV강연 및 토론회
- 대　　상 : 의원,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지역단체 회원 등

○ 홍보물 제작
- 동영상·홍보자료 및 교육교재 제작
- 지방분권 개헌 시나리오 공모

○ 국회·정당과의 협력 증진
- 국회 개헌특위와 포럼 발족 토론회 공동 주최
- 국회 지방분권개헌포럼 발족 요청
- 여야 정당 대표 및 주요 정치인과 지방분권 개헌 협약 체결

○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 지방분권개헌연구단 발족
- 시도순회 토론회 개최
-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
- 지방분권 개헌 1,000인 원탁회의 개최

【3】 청와대 방문 대통령 면담 추진

○ 시　　기 : 2015년 연내

○ 대　　상 : 전국 기초의회 의장 226명

○ 주요내용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 산 감 사 보 고 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15. 1. 8.~1. 9.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결산서의 작성책임은 의장협의회 회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작성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표시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시정권고 등 별첨)

2015년 1월 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감사 전라남도 대표회장 양영모 (인)

감사 경상남도 대표회장 유원석 (인)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 세입 · 세출 결산총괄

(단위 : 원)

예산액 ①	결산세입액 ②	집행액 ③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② - ③	비 고
956,681,000	922,081,706	825,252,390	96,829,316	

□ 세입 · 세출 결산내역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증(△)감 (B-A)	비 고
합 계	956,681,000	922,081,706	△34,599,294	
의장협의회 부 담 금	908,000,000	870,000,000	△38,000,000	경남 50%공제납부 청주시·청원군 통합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48,681,000	48,681,740	740	
기타수입 (예금이자 등)	0	3,399,966	3,399,966	

<세 출>

2014. 12. 31현재 (단위 : 원)

과 목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A)	지출액 (B)	예산액대비 집행 잔액 (A-B)	비고
합 계		956,681,000	825,252,390	131,428,610	
협의회활동	소 계	630,350,000	556,340,730	74,009,270	
	행사운영비	98,150,000	70,935,290	27,214,710	
	사무관리비	36,300,000	34,837,990	1,462,010	
	연구용역비	500,000	500,000	0	
	운영수당	1,400,000	700,000	700,000	
	업무추진비	40,000,000	33,367,450	6,632,550	
	시·도협의회지원금	454,000,000	416,000,000	38,000,000	사전공제 납부(경남)
사무처운영	소 계	316,542,000	268,911,660	47,630,340	
	사무관리비	15,230,000	10,648,100	4,581,900	
	임차료	57,396,000	57,396,000	0	
	공공운영비	23,532,000	20,609,380	2,922,620	
	수당	71,449,000	45,765,050	25,683,950	
	급량비	13,398,000	9,449,450	3,948,550	
	국내여비	28,800,000	21,853,800	6,946,200	
	기타직보수	78,131,000	78,021,460	109,540	
	연금지급금	7,626,000	7,432,940	193,060	
	업무추진비	19,980,000	17,165,480	2,814,520	
	자산취득비	1,000,000	570,000	430,000	
예비비		9,789,000	0	9,789,000	

□ 총 괄

○ 당초 세입목표액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부담금 908,000,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48,681,000원(2013년 이월금)을 합한 총 956,68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 실제 세입액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부담금 870,000,000원, 순세계잉여금 48,681,740원(2013년 이월금), 기타수입 3,399,966원(이자수입 등)으로 실제 총 세입액은 922,081,706원입니다.

○ 실제 세입액 922,081,706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825,252,390원이며, 집행잔액은 96,829,316원으로 2014 회계연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일반회계 통장잔고와 일치합니다.

○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별도 고정자산으로 관리됩니다.

□ 세입분야

○ 2014년도 세입예산액 956,681,000원과 세입결산액 922,081,706원의 차액은 경상남도에서 의장협의회 부담금 50% 공제 납부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으로 인해 38,000,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3,399,966원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는 2014년 실제 세입액 922,081,706원은 당초 보다 34,599,294원이 감소된 세입액입니다.

□ 세출분야

○ 2014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장협의회 활동비, 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총평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외여행 경비 삭감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정당공천 폐지 등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한 점이 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처 직제 및 정원 조정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여 지방4대 협의체 중에서 인력 및 예산이 매우 열악한 바 이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시정 및 권고, 지적사항

○ 시도대표의장협의회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 지방분권 등과 같은 정책사업과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을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지방의회 위상 및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주요 정책사항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편성한 「자문위원 및 고문 간담회」의 미실시로 인하여 예산 6,400천원을 불용한 것은 아쉬움이 있으니 2015년에는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기 바람.

○ 협의회장 임기 동안(약 2년)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회장 임기 만료와 함께 복귀하여 5개월간의 공백으로 인하여 예산 불용은 물론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처 운영, 정기총회, 시도대표회의 등 경상경비에 소요되어 각종 정책사업 추진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 산 총 칙

○ 제1조(예산총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000,829천원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예산명세)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3조(예비비)

예비비는 36,050천원으로 한다.

2015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1,000,829**	**100**	**956,681**	**44,148**
세입	지방의회 부담금	904,000	90.33	908,000	4,000
	(이월금)	96,829	9.67	48,681	48,148
합 계		**1,000,829**	**100**	**956,681**	**44,148**
세출	협의회활동	610,300	60.98	630,350	△20,050
	사무처운영	354,479	35.42	316,542	37,937
	예비비	36,050	3.60	9,789	26,261

2015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액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1,000,829**	**100**	**956,681**	**100**	**44,148**	
세입			904,000	90.33	908,000	94.91	4,000	
세입	이월금		96,829	9,67	48,681	5.09	48,148	
합 계			**1,000,829**	**100**	**956,681**	**100**	**44,148**	
세출	협의회활동	**소 계**	**610,300**	**60.98**	**630,350**	**65.89**	**20,050**	
세출	협의회활동	행사운영비	98,400		98,150		250	
세출	협의회활동	사무관리비	10,000		36,300		△26,300	
세출	협의회활동	연구용역비	500		500		0	
세출	협의회활동	운영수당	1,400		1,400		0	
세출	협의회활동	업무추진비	48,000		40,000		8,000	
세출	협의회활동	시·도협의회지원금	452,000		454,000		△2,000	
세출	사무처운영	**소 계**	**354,479**	**35.42**	**316,542**	**33.09**	**37,937**	
세출	사무처운영	사무관리비	14,830		15,230		△400	
세출	사무처운영	임차료	57,396		57,396		0	
세출	사무처운영	공공운영비	24,492		23,532		960	
세출	사무처운영	수당	89,874		71,449		18,425	
세출	사무처운영	급량비	14,616		13,398		1,218	
세출	사무처운영	국내여비	32,400		28,800		3,600	
세출	사무처운영	기타직보수	87,376		78,131		9,245	
세출	사무처운영	연금지급금	8,715		7,626		1,089	
세출	사무처운영	업무추진비	19,980		19,980		0	
세출	사무처운영	자산취득비	4,800		1,000		3,800	
세출	**예 비 비**		**36,050**	**3.60**	**9,789**	**1.02**	**26,261**	



참 고 사 항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 자문위원 현황
◈ 제7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 현황


회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의회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의장협의회 사무소는 각 시·도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조정·협의한다.
2. 시·도 및 시·군·자치구상호간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 및 조정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와 의정활동 지원·홍보
4.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배포
5. 국회 및 중앙정부의 대국민 정책홍보
6. 기타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 ①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각 시·군·자치구의회의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승계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의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임무) 모든 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도대표회

제8조 (시·도대표회) 협의회 의사결정기구로 시·도대표회를 둔다.

제9조 (시·도대표회장의 자격) 협의회의 시·도대표회장은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제10조 (시·도대표회장의 임기) ①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시·도대표회장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의장협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궐 선출된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시·도대표회의 임무) 시·도대표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추진한다.

1. 본 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임원선출
4. 회칙제정, 개정 및 폐기, 사업계획안 심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소집)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도대표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1인
4. 감 사 2인

제1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시·도대표회장 중 시·도대표회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시·도대표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본인의 사의나 유고시 그 직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 한다.

③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무총장

제17조 (사무총장) ①사무처의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원 중에서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의 업무범위는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8조 (회의 및 장소)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시·도대표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대표회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하며, 각 시·도별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협의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①총회의 의결, 승인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사항 보고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임원선출 보고
5.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 경과보고를 하며, 총회의 의결로서 시·도대표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소집) 모든 회의는 협의회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며, 협의회장은 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①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 일 때는 협의회장이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서면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22조 (사무처)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23조 (직원의 임면) ①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협의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하며,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전문위원 및 고문

제24조 (전문위원) ①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25조 (고문) ①협의회에 고문·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상임고문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 시·도대표회에서 협의하여 협의회장이 추대한다.

제 8 장 실 무 협 의 회

제26조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대표회장이 속한 의회 사무국장 및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 (기능) ①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지방자치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사전 검토 등

제 9 장 재 정

제28조 (재정)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지방재정법 근거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
2. 회비 및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29조 (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①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시·도대표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협의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 (결산) 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관리) 협의회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33조 (지출) < 삭 제 >

제 10 장 보 칙

제34조 (회칙의 개정) 회칙개정은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되,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 (준용규정)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은 (91년 11월 1일부터 본 회 회칙을 승인받은 날까지) 폐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9)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2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8)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명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명단

◉ 서울특별시(2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2)	FAX
1	종로구	김복동	무소속	삼봉로 43	2148-3811	2148-5971
2	중 구	이경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39길 40	3396-8178	3396-4270
3	용산구	박길준	새누리당	녹사평대로 150	2199-8760	2199-8355
4	성동구	박경준	새정치민주연합	고산자로 266	2286-5821	2286-5946
5	광진구	박삼례	새정치민주연합	능동로 76	450-1441	454-0439
6	동대문구	김명곤	새정치민주연합	천호대로 145	2127-5441	2127-5433
7	중랑구	서인서	새정치민주연합	봉화산로 179	2094-2005	2094-2009
8	성북구	임태근	새정치민주연합	북악산로 949-60	920-1830	920-1846
9	강북구	김동식	새정치민주연합	삼각산로 89	901-4561	901-4529
10	도봉구	조숙자	새정치민주연합	마들로 656	2091-4750	2289-1704
11	노원구	김승애	새정치민주연합	노해로 437	2116-3341	2116-4602
12	은평구	장창익	새정치민주연합	은평로 195	351-8301	351-5691
13	서대문구	류상호	새정치민주연합	통일로 279-22	330-8801	330-8807
14	마포구	차재홍	새누리당	월드컵로 212	3153-6000	3153-6019
15	양천구	심광식	새정치민주연합	묵동서로 337	2620-4480	2652-7223
16	강서구	이연구	새정치민주연합	등촌로 185	2600-1731	2600-1740
17	구로구	김명조	새정치민주연합	가마산로25길 9-24	2083-3801	2083-3862
18	금천구	정병재	새정치민주연합	시흥대로 73길 70	2627-2444	2627-2127
19	영등포구	박정자	새누리당	국회대로 596	2670-4000	2670-3614
20	동작구	유태철	새정치민주연합	장승배기로 161	823-5922	817-3184
21	관악구	이성심	새정치민주연합	관악로 145	879-7504	881-5892
22	서초구	최병홍	새누리당	남부순환로 2584	2155-7004	2155-7098
23	강남구	김명옥	새누리당	삼성로 154	3423-8199	3423-8926
24	송파구	임춘대	새누리당	백제고분로 242	2147-3608	2203-1816
25	강동구	성임제	새정치민주연합	성내로 55	3425-7363	3423-7295

◉ 부산광역시(16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1)	FAX
1	중 구	김영면	새누리당	중구로 120	600-4600	600-4099
2	서 구	류차열	새누리당	구덕로 120	240-4600	240-4099
3	동 구	오미라	새누리당	구청로 1	440-4600	440-4099
4	영도구	한영현	새누리당	태종로 423	419-4600	419-4099
5	부산진구	강외희	새누리당	시민공원로 30	605-6200	605-6159
6	동래구	천만호	새누리당	명륜로 94번길 55	550-4600	550-4099
7	남 구	이호승	새누리당	못골로 19	607-4600	607-4089
8	북 구	김만종	새정치민주연합	낙동대로 1570번길 33	309-4600	309-4099
9	해운대구	이문환	새누리당	중동2로 11	749-4600	749-4099
10	사하구	노승중	새누리당	낙동대로 398번길12	220-4600	220-4879
11	금정구	홍완표	새누리당	중앙대로 1777	519-5500	519-5509
12	강서구	정옥영	새누리당	낙동북로 477	970-4600	970-4089
13	연제구	주석수	새누리당	연제로 2	665-4600	665-4099
14	수영구	이정희	새누리당	남천동로 100	610-4600	610-4099
15	사상구	김정언	새누리당	학감대로 242	310-4600	310-4099
16	기장군	김정우	새누리당	기장대로 560	709-5002	709-5039

◉ 대구광역시(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053)	FAX
1	중 구	이만규	새누리당	국채보상로 139길1	661-2062	661-2069
2	동 구	허진구	새누리당	아양로 207	662-2072	662-2058
3	서 구	임태상	새누리당	국채보상로 257	663-2061	663-2069
4	남 구	배문현	새누리당	이천로 51	664-2081	664-2089
5	북 구	하병문	새누리당	옥산로 65	665-4031	665-4009
6	수성구	김진환	새누리당	달구벌대로 2450	666-2051	666-2068
7	달서구	배보용	새누리당	학산로 45	667-5807	667-5809
8	달성군	채명지	새누리당	달성군청로 33	668-2061	282-7733

◉ 인천광역시(10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2)	FAX
1	중 구	임관만	새누리당	신포로 27번길 80	760-7601	760-7629
2	동 구	김기인	새누리당	금곡로 67	770-6700	770-6749
3	남 구	장승덕	새누리당	독정이로 95	880-4900	880-4974
4	연수구	이창환	새누리당	원인재로 115	749-8310	749-8319
5	남동구	한민수	새누리당	소래로 633	453-5001	453-5029
6	부평구	박종혁	새정치민주연합	부평대로 168	509-7000	509-7640
7	계양구	곽성구	새정치민주연합	계양대로 126	450-5811	546-0171
8	서 구	이종민	새누리당	서곶로 307	560-5850	560-2797
9	강화군	유호룡	새누리당	강화대로 394	930-3500	930-3509
10	옹진군	김형도	새누리당	매소홀로 120	899-3030	899-3039

◉ 광주광역시 (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2)	FAX
1	동 구	이선순	새정치민주연합	서남로 1	608-3400	608-3468
2	서 구	황현택	새정치민주연합	경열로33	360-7500	365-8392
3	남 구	김점기	새정치민주연합	봉선로1	607-6001	607-6010
4	북 구	심재섭	새정치민주연합	우치로 77	410-8500	410-8289
5	광산구	이영순	새정치민주연합	광산로 29번길 5	960-8930	960-8934

◉ 대전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2)	FAX
1	동 구	유 택 호	새누리당	동구청로 147	251-6062	255-2159
2	중 구	문 제 광	새누리당	중앙로 100	606-6731	606-6745
3	서 구	박 양 주	새누리당	둔산서로 100	611-6827	471-5892
4	유성구	노 승 연	새정치민주연합	대학로 211	611-2644	611-2642
5	대덕구	이 세 형	새정치민주연합	대전로 1033번길 20	608-5071	621-2228

◉ 울산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2)	FAX
1	중 구	김영길	새누리당	단장골길 1	290-4220	290-4229
2	남 구	안수일	새누리당	돋질로 233	226-2727	226-5270
3	동 구	장만복	새누리당	봉수로 155	209-4002	233-0230
4	북 구	이수선	새누리당	산업로 1010	289-7160	219-7549
5	울주군	조충제	새누리당	문수로 382	257-8100	229-8019

◉ 경기도(3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031)	FAX
1	수원시	김진우	새정치민주연합	효원로 241	228-2500	233-5158
2	성남시	박권종	새누리당	성남대로 997	729-5501	757-8047
3	고양시	선재길	새누리당	고양시청로 10	965-5012	8075-9706
4	부천시	김문호	새정치민주연합	길주로 210	320-2501	625-8109
5	안양시	천진철	새누리당	시민대로 235	389-2500	389-2855
6	안산시	성준모	새정치민주연합	화랑로 387	481-2500	481-3228
7	용인시	신현수	새누리당	중부대로 1199	324-2501	324-2549
8	의정부시	최경자	새정치민주연합	시민로 1	828-2501	828-2525
9	남양주시	이철우	새누리당	경춘로 1037	590-2502	590-2529
10	평택시	김인식	새누리당	경기대로 1366	610-8301	610-8349
11	광명시	나상성	새정치민주연합	시청로 20	2680-2500	2680-2638
12	시흥시	윤태학	새누리당	시청로 20	317-5470	310-5070
13	군포시	김동별	새정치민주연합	청백리길 6	392-4000	392-4004
14	화성시	박종선	새정치민주연합	시청로 159	369-2500	369-1523
15	파주시	박재진	새누리당	시청로 66	940-8300	940-8319
16	이천시	정종철	새정치민주연합	부악로 40	644-2501	644-2539
17	구리시	신동화	새정치민주연합	아차산로 439	557-1500	550-2809
18	김포시	유영근	새누리당	사우중로 1	983-8645	983-8649
19	포천시	정종근	새누리당	중앙로 87	538-2501	538-2429
20	광주시	소미순	새누리당	행정타운로 50	761-4419	760-1425
21	안성시	유광철	새누리당	시청길 25	676-3002	678-3269
22	하남시	김승용	새누리당	대청로 10	790-5307	793-2365
23	의왕시	전경숙	새정치민주연합	시청로 11	345-2521	455-4111
24	양주시	황영희	새정치민주연합	부흥로 1533	820-5503	820-5539
25	오산시	문영근	새정치민주연합	성호대로 141	375-2870	375-2875
26	여주시	이환설	새누리당	세종로 1번지	887-2500	884-7122
27	양평군	박명숙	새누리당	군청앞길 2	773-4550	770-2820
28	동두천시	장영미	새누리당	방죽로 23	860-2500	860-2661
29	과천시	문봉선	새누리당	관문로 69	3677-2500	3677-2538
30	가평군	조중윤	새누리당	석봉로 181	580-4521	581-2850
31	연천군	이종만	새누리당	연천로 220	839-2510	839-2509

◉ 강원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3)	FAX
1	춘천시	김영일	새정치민주연합	삭주로 61	245-5002	245-5082
2	원주시	이상현	새누리당	시청로 1	737-5001	737-5025
3	강릉시	이용기	새누리당	강릉대로 33	640-4036	640-4070
4	동해시	김혜숙	새누리당	천곡로 77	530-2291	531-8745
5	태백시	유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태붐로 21	550-2508	553-7701
6	속초시	김진기	새누리당	중앙로 183	639-2500	631-9175
7	삼척시	정진권	새누리당	대학로 81	570-3501	570-3148
8	홍천군	허남진	새누리당	희망로 51	430-2300	430-2529
9	횡성군	한창수	새누리당	태기로 19번길 9	345-6969	340-2587
10	영월군	조정이	새누리당	하송로 64	370-2500	374-1052
11	평창군	유인환	새누리당	군청길 77	330-2500	333-7626
12	정선군	차주영	새누리당	봉양3길 20	560-2580	562-5203
13	철원군	배병인	새누리당	삼부연로 51	450-4364	450-5508
14	화천군	이홍일	새누리당	화천새싹길 40	440-2711	442-2710
15	양구군	김 철	무소속	관공서로 38	480-2500	481-9120
16	인제군	한의동	새누리당	인제로187번길 8	460-2151	460-2419
17	고성군	김형실	새누리당	고성중앙길 9	680-3501	680-3519
18	양양군	최홍규	새누리당	남문로 39	671-4809	670-2670

◉ 충청북도(1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3)	FAX
1	청주시	김병국	새누리당	상당로 155	200-6600	220-6619
2	충주시	윤범로	새누리당	으뜸로 21	850-2920	852-1378
3	제천시	성명중	새누리당	내토로 295	641-4771	645-6411
4	보은군	박범출	새누리당	군청길 38	540-3511	540-3519
5	옥천군	민경술	새누리당	중앙로 99	730-3931	733-9225
6	영동군	여철구	새누리당	동정로 1	740-3032	740-3039
7	증평군	지영섭	새누리당	삼보로 28	835-3181	835-3094
8	진천군	신창섭	새누리당	상산로 13	539-3771	533-0586
9	괴산군	박연섭	새누리당	임꺽정로 92	830-3581	833-9986
10	음성군	남궁유	새누리당	중앙로 173	871-2221	871-2229
11	단양군	이범윤	새누리당	중앙1로 10	422-9501	420-3019

◉ 충청남도(1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1)	FAX
1	천안시	주명식	새정치민주연합	번영로 156	521-2501	561-2529
2	공주시	이해선	새정치민주연합	봉황로 1	840-8000	850-2517
3	보령시	류붕석	새누리당	성주산로 77	930-3500	930-3668
4	아산시	유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시민로 456	540-2500	540-2891
5	서산시	장승재	새정치민주연합	관아문로 1	660-3340	660-2751
6	논산시	임종진	새누리당	시민로 210번길 9	730-3500	730-3660
7	계룡시	김혜정	새누리당	장안로 46	840-2700	840-2749
8	당진시	이재광	새누리당	시청 1로 1	350-4845	355-1901
9	금산군	김왕수	새누리당	군청5길 53	750-2801	750-2829
10	부여군	김태호	새누리당	사비로 33	830-2705	830-2739
11	서천군	한관희	새누리당	군청로 57	950-4500	952-7630
12	청양군	심우성	새누리당	문화예술로222	940-2500	940-2539
13	홍성군	이상근	새누리당	아문길 27	630-1901	630-1787
14	예산군	김영호	새누리당	사직로 33	339-7050	339-7099
15	태안군	박남규	새누리당	군청로 1	670-2503	670-2510

◉ 전라북도(14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3)	FAX
1	전주시	박현규	새정치민주연합	노송광장로 10	230-3500	230-3650
2	군산시	진희완	새정치민주연합	시청로 17	450-5810	452-8155
3	익산시	조규대	새정치민주연합	인북로 32길 1	859-4000	859-4058
4	정읍시	우천규	새정치민주연합	충정로 234	539-6000	536-5355
5	남원시	장종한	새정치민주연합	시청로 60	620-5001	620-5059
6	김제시	정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로 40	540-2700	540-2792
7	완주군	정성모	새정치민주연합	지암로 61	290-2500	244-7418
8	진안군	이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로 67	430-8901	433-4763
9	무주군	이한승	새정치민주연합	주계로 97	320-2500	320-2509
10	장수군	오재만	새정치민주연합	호비로 10	350-5601	350-2639
11	임실군	문홍식	새정치민주연합	수정로 30	640-2691	640-2699
12	순창군	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천로 33	650-1010	652-6782
13	고창군	이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로 245	560-2801	560-2759
14	부안군	임기태	새정치민주연합	당산로 91	580-4500	580-4099

◉ 전라남도(22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1)	FAX
1	목포시	조성오	새정치민주연합	양을로 203	270-3500	270-8031
2	여수시	박정채	새정치민주연합	여서1로 121	690-7000	690-7021
3	순천시	김병권	새정치민주연합	장명로 30	749-3500	749-3507
4	나주시	홍철식	새정치민주연합	시청길 22	330-8500	330-7820
5	광양시	서경식	새정치민주연합	행정2길 5	797-2500	797-2595
6	담양군	윤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추성로 1371	380-3500	380-3590
7	곡성군	이국섭	새정치민주연합	군청로 50	363-4450	363-7764
8	구례군	서은식	새정치민주연합	봉성로 1	780-2500	782-1331
9	고흥군	장세선	새정치민주연합	흥양길 40	830-5500	830-5506
10	보성군	김판선	새정치민주연합	송재로 165	850-5800	853-0351
11	화순군	이 선	새정치민주연합	동헌길 23	374-0701	374-0756
12	장흥군	곽태수	새정치민주연합	장흥로 21	863-6063	863-6067
13	강진군	김상윤	새정치민주연합	탐진로111	430-3500	430-3509
14	해남군	이길운	새정치민주연합	군청길 4	535-4101	530-5595
15	영암군	이하남	새정치민주연합	군청로 1	471-0994	470-2595
16	무안군	이요진	새정치민주연합	무안로 530	450-5500	450-5595
17	함평군	정수길	무소속	중앙길 200	320-2522	320-3451
18	영광군	김양모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로 203	350-5500	351-1380
19	장성군	김재완	새정치민주연합	영천로 200	390-7500	390-7595
20	완도군	김동삼	새정치민주연합	청해진남로 51	554-0153	554-8894
21	진도군	주선종	새정치민주연합	철마길 25	540-3500	540-3586
22	신안군	양영모	무소속	천사로 1004	243-9211	240-8000

◉ 경상북도(23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4)	FAX
1	포항시	이칠구	새누리당	시청로 1	270-0200	270-0222
2	경주시	권영길	새누리당	양정로 260	779-6850	760-7439
3	김천시	김병철	새누리당	시청1길 223	432-3001	433-9342
4	안동시	김한규	새누리당	퇴계로 115	856-3100	840-6409
5	구미시	김익수	새누리당	송정대로 55	450-6400	451-3930
6	영주시	박찬훈	새누리당	광복로 65	639-7200	631-2372
7	영천시	권호락	새누리당	시청로 16	330-2950	330-2989
8	상주시	남영숙	새누리당	중앙로 111	535-1700	535-9854
9	문경시	이응천	새누리당	중앙로 50	550-8030	550-8039
10	경산시	이천수	새누리당	남매로 159	053-811-4777	811-4778
11	군위군	김윤진	새누리당	군청로 200	380-6400	380-6409
12	의성군	신원호	새누리당	후죽5길 24	830-6400	832-3595
13	청송군	이광호	새누리당	군청로 51	873-5798	870-6409
14	영양군	김시홍	새누리당	군청길 37	680-5001	680-5029
15	영덕군	이강석	새누리당	군청길 116	730-6400	730-6409
16	청도군	예규대	새누리당	청화로 70	370-6400	370-6409
17	고령군	이달호	새누리당	왕릉로 55	950-6400	954-1186
18	성주군	이성재	새누리당	성주로 3200	933-4208	933-8125
19	칠곡군	장세학	새누리당	군청1길 80	973-0101	973-0104
20	예천군	이철우	새누리당	군청앞길 2	650-6403	650-6409
21	봉화군	황재현	새누리당	봉화로 1111	673-5840	673-6802
22	울진군	이세진	새누리당	울진중앙로 121	789-6400	789-6409
23	울릉군	이철우	새누리당	도동길 143	790-6400	790-6409

◉ 경상남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5)	FAX
1	창원시	유원석	새누리당	중앙대로 151	225-5003	225-4743
2	진주시	심현보	새누리당	동진로 155	749-5637	749-2844
3	통영시	강혜원	새누리당	해안로 515	650-2903	646-2245
4	사천시	김현철	새누리당	용현면 시청로 77	831-3900	831-3949
5	김해시	배창한	새누리당	김해대로 2401	340-7102	340-7269
6	밀양시	허 홍	새누리당	밀양대로 2047	359-6202	359-6236
7	거제시	반대식	새누리당	계룡로 125	639-7202	639-7259
8	양산시	한옥문	새누리당	중앙로 39	392-8503	392-8519
9	의령군	오 용	무소속	충익로 63	570-2062	570-2079
10	함안군	김정선	새누리당	말산로 5	580-2902	580-2929
11	창녕군	손태환	새누리당	군청길1	530-6001	533-6303
12	고성군	최을석	새누리당	대가로 13	670-5700	670-5759
13	남해군	박광동	새누리당	망운로 9번길 12	860-3400	860-3738
14	하동군	김봉학	새누리당	군청로 23	880-2900	880-2939
15	산청군	민영현	새누리당	산엔청로 3	970-7400	973-7638
16	함양군	황태진	새누리당	고운로 35	960-5050	960-5703
17	거창군	이성복	새누리당	중앙로 103	940-8001	940-8059
18	합천군	허종홍	새누리당	동서로 119	930-3600	930-3619

임원 현황



전국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초대 전·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이종원	김익주 최진호	권영환	문기현, 김장환, 이계동, 조정환, 고화영 김동진, 나상규, 강영진, 이용득, 정한재 고의돈

제2대 전반기

회 장	부회장	이 사
김진유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장승호

제2대 후반기

장	고 문	부회장	감 사	운영위원
김형수	이종원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박희영	조길휘 장승호	손영수, 선형채, 김무열 오면교, 박재수, 남용길 오선범

제3대 전반기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김종웅	박연석 정태섭 류광현	신치범 윤창호	이재혁, 이장수, 정동배, 추상은, 서진근 장상훈, 신병희, 박영수, 임창규, 허동섭

제3대 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정금영	마학관 이창호 장상훈	김대희 한성율	김한민, 신병희, 김정태, 김성만, 김용서 박장열, 이원식, 박종호, 김기환, 정동배

※ 부산광역시 대표회장은 2000. 7. 1 부산진구의회 구태희 의장으로 변경

제4대 전반기

회장	상임부회장	부 회 장	감 사
이재창	김창순, 변양섭 이종호, 정옥성 공원식	송석복, 정태민, 정상진 최주용, 이건실, 이용학 박종윤, 강영철	김송식 배종갑

※ 최병훈 충북대표회장은 2004. 1. 31자로, 장상훈 충남대표회장은 2004. 2. 14자로 의원직 사임

제4대 후반기

	수석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재창	공원식 이정원	조홍제, 장동호 유기영, 박규배	김기성, 차경섭, 오태진 김두겸, 주재민, 김정국 정복영, 지종환	박판년 박삼래

※ 이영신 경남대표회장은 2004. 12. 28자로 의원직 사임, 2005. 7. 29 경북 대표회장 공원식 수석상임부회장이 김정국 회장으로 변경, 2005. 12. 28 공석이던 수석상임부회장에 이정원 충남대표회장 선출

제5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정동수	정우성	김진성, 김경동, 윤창열, 조영복, 이의규, 박성민, 이수영, 남동우, 이충재, 나익수, 김철곤	이건실 최학철

제5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윤규진	조홍제	장상수, 이언기, 오향섭, 설장수, 박래환, 형남선, 원경묵, 고용길, 최찬욱, 장복성, 김영립	김준배 김천일

※ 이건실 전국회장(강원대표회장)은 2009. 6. 16자로 회장직 사임

※ 2010. 6. 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임 윤규진 전국회장(서울대표회장)은 2000. 5. 4자로 사임, 박래환 부회장(울산대표회장)은 5. 3자, 김준배 감사(충남대표회장)는 4. 2자, 김천일 감사(경북대표회장)은 4. 12자, 장복성 사무총장(전남대표회장)은 3.17자로 사임

제6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상구	윤호길	성임제, 도영환, 신은호, 권용일 박종서, 장만복, 권혁록, 연철흠 조지훈, 김상복, 황영상	김강수 김동욱

※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김기완 수석부회장(경기도대표회장)은 2012. 1. 12일자로 사임

제6대 후반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김인배	박용모	, 조재구, 유재호, 김동찬, 김종성, 이순걸, 임기중, 이명연, 배종범, 김근환, 배종천	김복만 노영관

※ 2013. 8. 31자로 김종성 사무총장이 사임하여 2013. 10. 15. 노영관 감사가 사무총장 선임, 감사가 1인이 되었음

현황



자문위원 현황

직 위	성 명	이메일	연락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세욱	swcsyl@hanmail.net	010-5218-9008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사장	임경호	rilc@rilc.re.kr	011-9152-7393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강형기	kanghk@chungbuk.ac.kr	010-5332-5971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	leekw@inha.ac.kr	010-6249-0648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열	kychoe@kiu.ac.kr	010-3072-7430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육동일	diyook@cnu.ac.kr	010-5453-0612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한상우	sangw@hanyang.ac.kr	010-7160-3358
교수	최민수	msoo1919@naver.com	010-5206-1556

7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 연

제7회 의정봉사대상 수상대상자 현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조숙자**	50.12.13	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입안활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 등 11건 발의 ◦ 해소촉구 결의문 등 발의(15건) ◦구정질문 등을 통해 민생 관련사항 개선 및 시정 요구(16건) ◦소외계층 배식봉사 등 지역봉사활동 적극 전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정옥영**	58.12.29	여	◦ 의정활동과 자치입법활동으로 선진의회상 구현 ◦의원연찬회·공무연수 실시로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성숙한 의회상 정립(23회) ◦ 교류 2회, 각계각층 간담회 15회, 의회민원 35건 처리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성숙된 지방의회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배문현**	65.05.19	남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입안활동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구정질문 등을 통해 민생 관련사항 개선 및 시정 요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 삭감으로 예산절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 시정 요구 - 340건(시정 128건, 처리요구 3건, 건의 209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장승덕**	52.06.20	남	◦단결하고 화합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범 ◦의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리더십 함양 추진 ◦지역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의정질문 및 정책개선 건의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	**이영순**	58.12.14	여	◦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 ◦ 주민 간담회 등 구민의 목소리 구정에 반영 건의 ◦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 수시 방문, 의견수렴 의정활동 적극 반영 ◦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자치입법 추진(12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유택호**	48.08.21	남	◦ 열정적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 ◦ 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진 ◦ "동구의회에 바란다"소리함을 통한 의견수렴 등 열린 의회상 정립 ◦ 2년 연속 장애인정책 우수의회 선정 - (사)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포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안수일**	59.08.08	남	◦ 내실있는 회기운영 및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 의원총회를 통한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에 기여 ◦ 자원봉사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기여 ◦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 추진	
경 기 도 성남시의회 (운영위원장)	**최만식**	70.07.09	남	◦ 의회운영위원장 및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 주요현장 수백 곳 방문 및 애로청취 - : 5,553억원(성남시 예산의 23.6%) - 일반안건 및 조례 : 107건 심사 ◦ 집행부 견제와 감시 및 상호존중으로 화합과 상생의 의정활동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경 기 도 고양시의회 (의장)	선재길	55.03.29	남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시정질문,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 - 안건발의 21건(조례안17/결의안4) - 시정질의 4회, 9건 ◦‘ 연구회’ 활동을 통한 정책의회 구현 ◦한 차원 높은 의정지원시스템 구축 ◦국내외 교류활동 강화	
강 원 도 인제군의회 (의장)	한의동	54.12.08	남	◦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 발의(24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15건) ◦올바른 군정 방향 제시(자료요구 300건) ◦인제군민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장)	박범출	65.02.25	남	◦풍부한 지방의정 경력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 ◦뛰는 의원상 정립으로 모범 위원상 구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지방의회 정착 도모 ◦능동적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통한 의회의 역할 정립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장)	주명식	47.01.20	남	◦임시회 및 정례회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 ◦의원 연찬회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장애인 등 복지시설 수시 점검으로 소외계층 권익향상에 노력 ◦의정모니터(44명) 간담회 실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전라북도 장수군의회 (의장)	**오재만**	45.12.22	남	◦ 전문성 확보를 위한 3개군 직무연수 주관 ◦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입안활동 -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등 4건 발의, 건의(결의)안 2건 발의 ◦ 장애인 등 복지시설 수시 점검으로 소외계층 권익향상에 노력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장)	**이길운**	66.03.09	남	◦ 위한 입안활동 - 해남군 우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 투명사회협약 및 실천 지원 조례안 개정 ◦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장)	**박찬훈**	54.08.03	남	◦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통한 자치입법 추진(3건) ◦ 통한 시정발전 촉구 및 대안제시 ◦ 행정사무감사로 집행기관 견제 및 시정요구 ◦ 폭 넓은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 기여 ◦ 나눔과 베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재철**	44.09.26	남	◦ 제2대 통합창원시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올바른 의회상 정립 ◦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적극적 의정활동 전개 ◦ 철저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의 대표로서 진정한 지역 주민의 봉사자 역할 수행	

2015년 정기총회

발행일 : 2015. 1. 26.
발행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현대토픽스 1207호)
발행인 : 심우성 전국대표회장
전 화 : 02-3444-5910, 5915
팩 스 : 02-3444-5918
Homepage : www.ncac.or.kr
인 쇄 : 위너스기획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1길 2-1
(코리아B/D 201호)
☎ 02-2268-0494~6